

# 한국 통일연구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 유럽연합의 변화와 시사점\*



황 기 식

제1저자 동아대학교  
(kshwang@dau.ac.kr)



최 인 영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20138214@bufs.ac.kr)



정 다 감

제2저자 동아대학교  
(heesunjung2001@yahoo.com)

## 국문요약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주목받으면서, 한반도 통일의 개념 정의가 본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에 찬성 41.1%, 반대 23.5%로, 이들을 세대별로 분류하면, 20대 49.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 담론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평화로운 공존 형태의 통일’에 20대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 개념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했다면, 현재의 2030세대는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를 더욱 설득력있는 합리적인 통일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우호적인 공존 및 다른 국가들 간의 동질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통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통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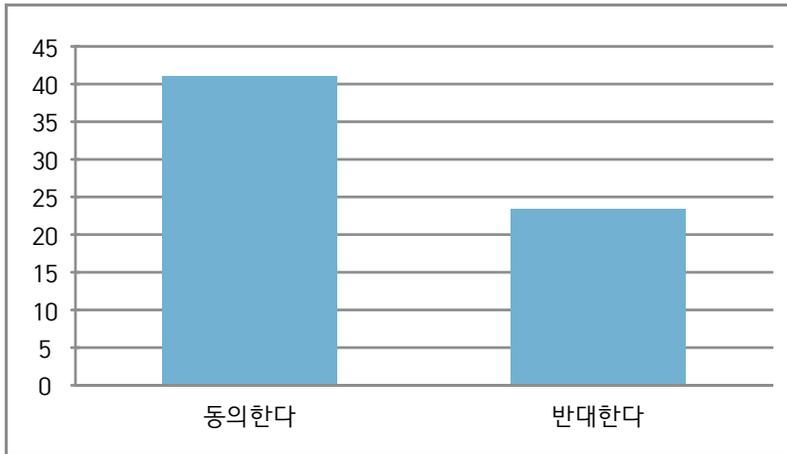
주제어 : 한반도 통일, 통일개념의 변화, 점진적 통합, EU 공동체, 평화적 공존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2018년 02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함께 부각되었다.

〈표 1〉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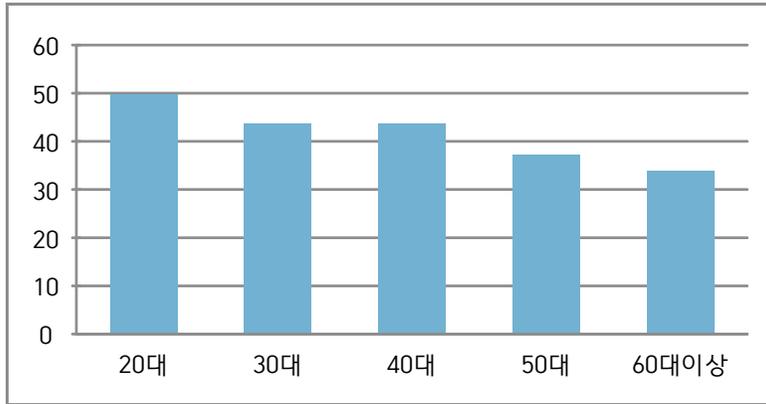


출처 : 통일평화연구원(2017)

〈표 1〉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 반대는 23.5%였다. 이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20대는 49.7%,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의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실시.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9459> (검색일 : 2019년 1월 20일).

〈표 2〉 ‘반대한다’ 응답자의 세대별 분류<sup>2)</sup>



출처 : 통일평화연구원(2017)

〈표 2〉 이와 함께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남한과 북한의 단일 된 통일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본 질문에 대해서는 20대의 62.3%가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동의를 보였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더욱 강조돼 왔다면, 현재의 2030세대는 이 개념 자체에서 변화하여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에 대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통일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돼 가는 통일의 개념으로 인하여 2018년 이루어진 남북 단일팀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을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거의 통일 개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존하며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방법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여기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이처럼,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국가통합, 즉 ‘Full Integration’<sup>3)</sup>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확대된 개념인 국가협력, ‘Sustainable

2)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6~7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의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실시.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9459> (검색일 : 2019년 1월 20일).

Cooperation<sup>4)</sup>도 지금의 우리에게 적절한 통일 모델로 볼 수 있다는 인식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일의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통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온 통일연구 현황 및 큰 흐름을 정리해 본 후 새로운 통일연구의 방향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점진적 통합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국가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친 유럽연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점진적인 통일 개념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통일 연구의 큰 맥락과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달라지는 통일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통일 연구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최근의 통일이론 현황 및 국민의식 변화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향후 통일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 제Ⅳ장에서는 하나의 국가를 희망하는 국가통합(Full Integration)이라는 형태의 통일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화(Communization) 형태인,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시켜 놓은 EU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U를 연구사례 및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EU가 두 국가 간의 통일이나 통합을 논의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유럽연합으로의 통합된 형태로 제도화시키는 모델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국가협력과 같이, EU도 국가통합을 강조했던 기존 여론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 시키고자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음에서 알 수 있듯이, 갈수록 국가협력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EU도 국가통합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보다 더 폭 넓은 협력 상태를 안정화 시켜 놓은 국가협력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Sustainable Coopera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모델을 지향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통일 개념이 기존의 국가통합이론과는 다른, 국가협력의 형태로 통일연구에 대한 방향을 변화시켜야 함을 제시하고자한다.

---

3) 국가통합(Full Integration)이란 국가의 존립조건인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국가를 나타낸다. 전적으로 산업,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 과정 등. 일체를 포함한다.

4)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이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안보 동맹과 더불어 평화, 안정, 개발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포괄적인 신 개념의 통일협력모델이다.

## II. 한국통일 연구의 흐름

우리나라는 분단 70년 동안 통일 관련 연구가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총 3,000여 건이 진행되었고, 이 중 약 93% 이상의 연구가 탈냉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통일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영역별·시기별·분석수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연구 경향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정치·법제도,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 중에서, 정치·법제도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시기별로는 통일 이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통일 과정이나 통일 통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또한, 분석수준별로는 남북관계 차원의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내적 차원의 연구가 뒤를 이었으며, 국제적 차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졌다.

통일 관련 연구 주제는 시대적·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의 중점과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1990년대는 탈냉전과 독일통일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았고, 북핵문제의 대두와 햇볕정책 실시 등에 따라 쟁점과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이 시행되면서 비정치적분야의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다만, 2000년대 후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연구주제는 또 다시 변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 맞춰 통일의 필요성 및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와 영역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 통일 연구의 큰 맥락 및 흐름을 살펴 본 후, 달라지는 통일의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통일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기존의 통일 연구는 국가통합, 즉 ‘Full Integration’ 이론을 전제로 해 왔다. 따라서 국가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주된 흐름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 1.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가치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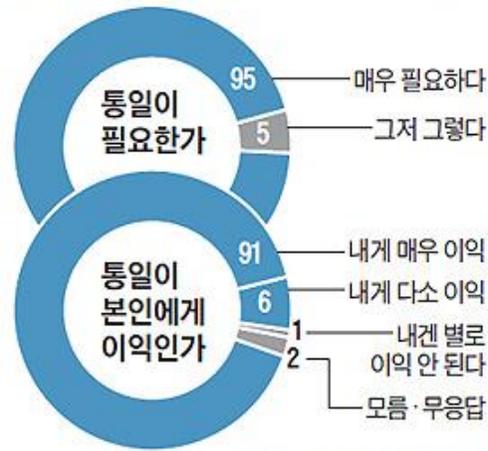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은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sup>5)</sup>으로 통일에

5)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은 2014년 1월~ 5월까지 중국 단둥, 옌지 등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남(對南) 인식, 북핵 및 주변국에 대한 인식,

대한 인식, 북핵 및 주변국에 대한 인식,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미디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한 자료에서 95명은 통일을 원하며, 97명은 통일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sup>6)</sup>

〈그림 1〉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 (단위: 명)

北주민 100명에게 물어보니...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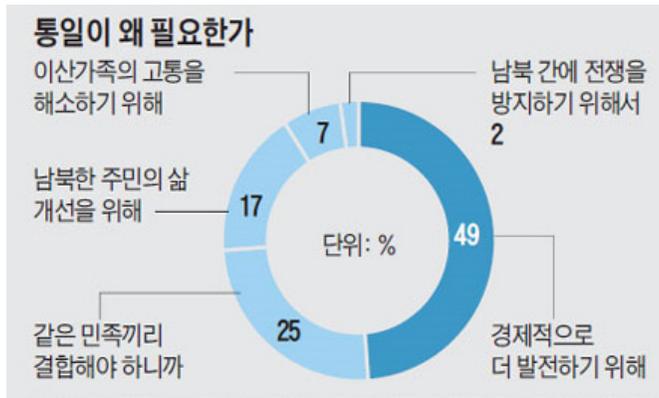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2014년 1월~ 5월)

〈그림 1〉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나 중국 등에 머물고 있는 100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심층 대면 인터뷰로는 처음이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조사임은 틀림없다.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95명은 ‘통일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미디어 이용 실태 등을 심층 인터뷰함. 출처: 뉴스zum.  
 6)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본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 100명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고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임. 2012년 입국한 주민이 4명, 2013년 53명, 2014년 43명 등으로, 최근 북한 상황과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상세히 증언함. [참고] 인터뷰 대상자 성별은 남자가 48명, 여자가 52명. 연령별로는 50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2명, 30대가 10명, 70대가 4명, 10대와 20대가 각각 2명임(조선일보 2014/07/07).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7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7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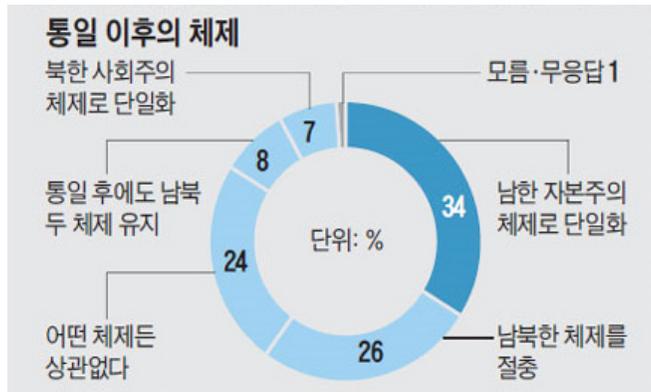
〈그림 2〉 북한주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출처]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2014년 1월~ 5월)

〈그림 2〉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8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같은 민족끼리 재결합해야 하니까’라는 응답이 24명(25%)이었고, ‘남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16명(17%),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6명(7%) 등이 뒤를 이었다. 그들 중 97명은 ‘통일은 내게도 매우 또는 다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림 3〉 북한주민 통일 이후 체제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출처]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2014년 1월~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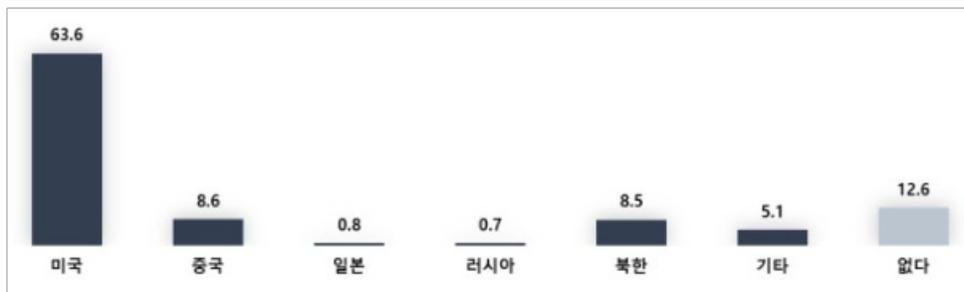
〈그림 3〉 통일 한반도의 체제에 대해서는 ‘남한 체제(자본주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북한 체제를 절충해야 한다(중국식 시장사회주의)’는 응답이 26명,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24명

등이었다. 이번 심층 인터뷰 결과, 그들은 대부분 생활고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으며, 남한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통일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7)</sup>

## 2. 남북관계와 주변국 영향 및 여론 분석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남북통일관련 주변국 및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sup>8)</sup>

〈그림 4〉 안보 및 경제측면 주요 국가 인식조사



[출처] “통일한국 포럼”의뢰로 2018년 3.13~14일 (주)여론조사공정 실시

[자료] 가중치부여:2018.02.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립가중(Rim Weight). 오차범위:95% 신뢰수준±3.0%. 응답률:8.4%.

〈그림 4〉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인식과 관련, 안보·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으로 ‘미국’(63.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없다(12.6%), 중국(8.6%), 북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는 남성(70.2%), 60세 이상(75.8%), 대구/경북(82.1%) 응답자에서 미국을 안보·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성(57.1%), 40대(50.3%), 광주/전라(50.1%) 응답자의 경우는 전체 평균(6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7) 강동완, 동아대 교수(통일문화연구원 연구기획실장), 2014.07.07.

8) 〈그림 3, 그림 4〉 여론조사는 “통일한국 포럼”의 의뢰로 2018년 3.13~14일 일반국민 1,059명을 대상으로 (주)여론조사공정에서 실시함. [자료] 가중치부여:2018.02.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립가중(Rim Weight). 오차범위:95% 신뢰수준±3.0%. 응답률:8.4%.

〈그림 5〉 안보 및 국방측면 위협국가 인식조사



[출처] “통일한국 포럼”의뢰로 2018년 3.13~14일 (주)여론조사공정 실시

[자료] 가중치부여:2018.0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립가중(Rim Weight). 오차범위:95% 신뢰수준±3.0%, 응답률:8.4%.

〈그림 5〉 반면,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으나, 북한22.7%, 미국22.2%, 일본21.1%이라는 응답도 20% 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경우, 안보·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반대로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으로 3번째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의 북한 선제 타격론<sup>9)</sup>, 핵버튼 발언<sup>10)</sup>, 코피작전<sup>11)</sup> 등과 같은 한반도 전쟁관련 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 연령별 분석 결과, 남성(28.0%)과 50대 이상(50대:26.1%, 60세 이상: 24.5%), 대구/경북(40.2%) 응답자는 ‘북한’이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27.9%), 20대(31.8%), 30대(26.7%), 40대(28.5%) 응답자는 ‘중국’이 안보·국방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서울(28.5%), 부산/울산/경남(34.7%), 강원/제주(34.5%) 지역 응답자는 ‘중국’, 대구/경북은 ‘북한’(40.2%), 경기/인천은 ‘일본’(27.2%),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라는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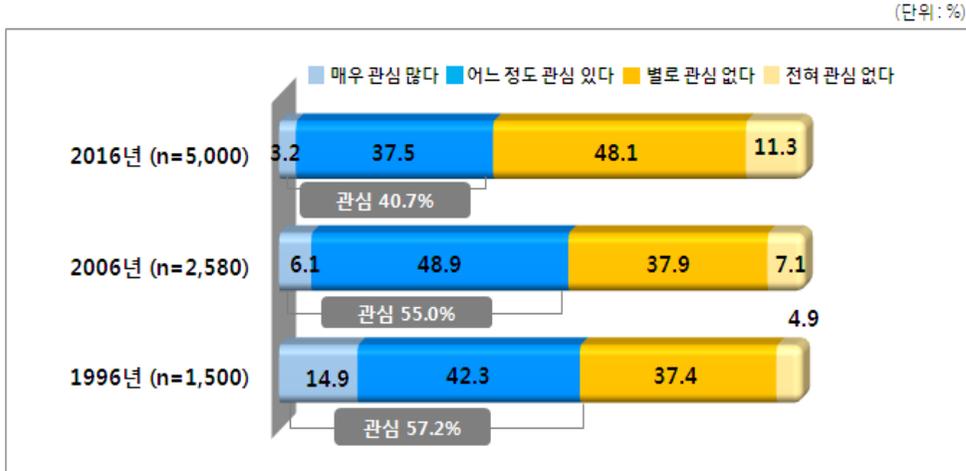
9) 북한 선제 타격론(preemp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협 요소를 먼저 타격해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임.

10)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단추’ 발언에 대해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을 갖고 있다”고 응수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말(중앙일보 2018/01/02).

11)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대북타격 방안으로 북한의 상징적 시설 한·두 곳을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으로, 이 타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임.

### 3. 한국의 인식변화 및 여론 분석

〈그림 6〉 연도별 북한에 대한 관심도 추이<sup>12)</sup>



[출처]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Sep. 2014), 아산정책연구원.

〈그림 6〉 본 조사에 따르면, “북한주민에 관심 있다”(56.0%)는 응답보다 “북한에 관심 없다”(67.0%)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20대와 30대, 이념성향별로 진보와 중도 성향에서 관심도 하락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1996년 57.2% → 2006년 55.0% → 2016년 40.7%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률은 1996년 14.9% → 2006년 6.1% → 2016년 3.2%로, 20년 전에 비해 10%p 이상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가지는 통일과 관련하여 태도와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통일 연구의 큰 맥락과 흐름을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통일 연구는 북한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통일 연구의 주를 이루어 오고 있었으며,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영향 및 여론들을 분석하는 연구, 통일에 있어서 남남 갈등 문제로서의 북한문제와 통일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국가통합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써, 변화해가고 있는

12) 〈그림 6〉 아산정책연구원의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2014년 9월 1일~9월 17일 실시)에 대한 본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함.

현재의 통일 개념의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본고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신 개념의 통일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의 통일 접근법을 담아내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최근의 통일이론 현황 및 국민의식 변화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향후 통일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Ⅲ. 새로운 통일연구의 방향

한반도 통일관련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일을 한 국가로 만드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남과 북이 friendly한, 다시 말해 우호적인 두 국가가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라는 개념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 연구보다 한층 더 발전된 ‘Friendly Unification’이라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 변화를 알 수 있다. 점진적 통일을 희망하는 새로운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닌, 우호적 관계의 평화-공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모델로 보는 것이다. 이로써 젊은 층들이 희망하는 통일의 모습은 기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통일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함께 존재하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통일 모델로서 ‘Community’로 정의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새롭게 변화된 통일 형태로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인의 통일이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인의 통일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이 가지는 통일과 관련하여 태도와 가치관 또한 함께 변화해 오고 있다. 한국인의 통일 의식·가치관 조사<sup>13)</sup>를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통일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 추세를 나타낸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20대 및 30대 젊은 층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1.8%, 38.3%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13) <그림 7, 그림 8>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통일 의식·가치관 조사’를 실시함. 본 여론조사는 지난 1996년 이래 2001년, 2006년, 2008년, 2013년에 이어 6번째로 월드리서치와 아젠더센터에 의뢰해 진행된 조사임.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의 변화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증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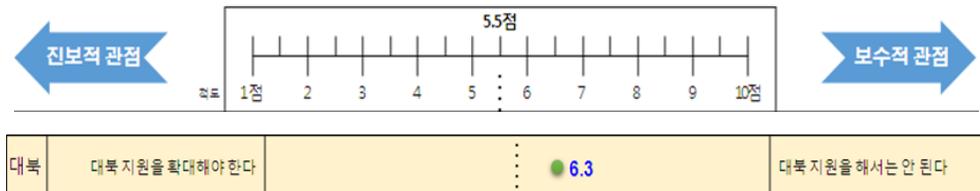
〈그림 7〉 한국인의 통일 의식·가치관 조사



[출처] 문체부(2016), '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그림 7〉 본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이 32.3%에 달했다. '가급적 빨리'라고 답한 비율은 16.9%였으며 50.8%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다. '통일에 대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 16.8%, 2008년 25.1%, 2013년 25.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라고 답한 비율은 2006년 28.0%, 2008년 25.1%, 2013년 19.0%로 계속 줄어들었다.

〈그림 8〉 대북 현안·대북지원에 대해 완강한 반대기류



[출처] 문체부(2016), '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 평균값(단위: 점) : 왼쪽 ①에서 오른쪽 ⑩까지의 10점 척도 평균, 중간은 5.5점

〈그림 8〉를 통해 북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의 실질적 접점이 줄어들면서, 대북지원 '반대' 입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북지원 확대와 이와 반대되는 대북지원 반대에 대한 기류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써,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60대 이상(6.38점), 보수성향(6.35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통일방식 선호도 및 세대별 격차

〈표 3〉 통일방식 선호도<sup>14)</sup>

(단위 : %)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한식 통일	35.3	41.0	55.4	59.2	48.1	47.7
체제 공존(연방제)	52.9	46.6	29.8	32.8	33.5	39.1
제3의 체제	8.3	10.0	13.7	5.6	13.6	10.0
기타	3.5	2.4	1.0	2.4	4.8	3.2

〈표 3〉 2016년 실시된 ‘통일방식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식 체제 통일(47.7%) > 체제 공존 방식(39.1%) > 제3의 체제(10.0%)로 나타나며, 기존 연구결과<sup>15)</sup> 역시 ‘한국식 체제 통일’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과반수 가까이 (47.7%)가 ‘한국식 체제 통일’(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연방제)에 대한 선호도는 39.1%이다.

이러한 변화를 세대를 구분하여 아래의 〈표 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 내 분화<sup>16)</sup>

세대 명칭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
통일준비세대(19-34세)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냉전통일세대(35-44세)	구소련 붕괴, 독일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북한이탈주민, 금강산 관광
민주화통일세대(45-54세)	산업화, 민주화, 서울올림픽, 북한 바로알기
체제경쟁세대(55-74세)	반공국시, 무장공비, 1.21사태, 7.4남북공동성명, 유신체제, 베트남 패망

[출처]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 2015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2015년 9월 11일) 발표자료

14)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2016년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15) 기존 연구결과 중 동아시아연구원(EAI, 2015년) 연구결과에서도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체제 공존 방식(연방제)’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 추세이다.

1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 9월 11일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의식조사’에 대한 발표 자료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대비 4.8% 감소한 수치임. 특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20대와 30대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12.4%포인트, 14.1%포인트가 감소함. 본 의식조사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표 4〉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별 시각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을 기준으로 통일준비세대(19~34세), 탈냉전통일세대(35~44세), 민주화통일세대(45~54세), 체제경쟁세대(55~74세) 등 4가지 세대로 구분하였다.

이 표에서 구분된 4가지 세대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 1) 통일준비세대(19~34세)의 경우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고, 경계 및 적대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으며, 한국식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진다.
- 2) 반면 체제경쟁세대(55~74세)의 경우, 통일준비세대와 정확히 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3) 탈냉전통일세대(35~44세)와 민주화통일세대(45~54세)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의 개념이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통합’의 앞선 사례로서 EU의 통합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IV. EU의 ‘다중속도’ 접근법

민주주의 국가와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근본 원칙 중 일부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럽 통합을 광범위한 의미의 새로운 통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U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하나의 국가를 희망하는 국가통합(Full Integration)이라는 형태의 통일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Community) 형태인, 국가협력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특히 우리의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임과 같이, EU도 국가통합을 강조했던 기존 여론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협력,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여론이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국가협력의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

본고에서 EU를 연구사례 및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EU가 두 국가 간의 통일이나 통합을 논의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유럽연합으로의 통합된 형태로 제도화시키는 모델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유럽 통일연구에 대한 주된 흐름과 이론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광범위한 의미의 새로운 통일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지역 통합을 위한 모델로서의 유럽 연합(EU)<sup>17)</sup>

EU의 광범위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또는 경제 협력체의 구성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1952년 Schuman Declaration<sup>18)</sup>으로 알려진 석탄과 강철을 통합하는 기구인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sup>19)</sup>가 발족되고, 1957년에는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위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EEC)<sup>20)</sup>, 즉 유럽 공동 시장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EEC는 유럽 공동체(EC)<sup>21)</sup>로 발전하였고, 1991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sup>22)</sup>이 합의되어

17)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2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국가 연합.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이다. 총 인구는 약 5억 명이 넘으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23% 정도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24개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러시아어, 아랍어도 일부 사용된다. 201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퇴 신청을 하였다.

18) 슈만선언(Schuman Declaration)은 프랑스 외무장관 로버트 슈만 (프랑스어: Robert Schuman)이 1950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석탄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 기구 하에 통합할 것을 제창. 또한 그는 “그와 같은 계획의 채택이 유럽 연방(European Federation)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전쟁물자의 생산에 맡겨져 왔던 지역들의 운명을 변경시키게 될 것”이라고 선언. 즉, 1951년 4월 18일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설립조약이 파리에서 서명되어 그 이듬해 1952년 7월 25일에 발효. 서명국은 베네룩스 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였다. 출처: EUROPA - Declaration of 9 May 1950.

19)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1-2002)는 냉전 기간 동안 서유럽을 통합하고 유럽연합의 현대적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국제조직으로, ‘Schuman Declaration’에서 유래.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파리협정 체결로 공식 출범함.

20)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58 - 1993, 나중에 유럽 공동체(EC)로 개편됨)는 1957년 3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당시에는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영국에서는 공동 시장(Common Market)으로 더 잘 알려짐.

21)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는 1992년에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하에서 도입된 유럽 연합(EU) 3개의 기둥 가운데 제1의 기둥을 구성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던 국가 간의 공동체이다. EC는 초국가주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기원이 되고 있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3개의 기둥 구조는 폐지되었고, 유럽 공동체와 나머지의 2개의 기둥은 통합되어 소멸됨.

22) 마스트리히트 조약 (Treaty of Maastricht)은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 제공.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통화의 단일화, 공동 방위 및 공동 외교 정책 추구 등 보다 더 긴밀한 경제적·정치적 연합체인 유럽 연합(EU)로 발전하였다.

EU는 1950년대 초반부터 지역 통합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EU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 프랑스)과 콘라트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독일)<sup>23)</sup> 같은 미래의 정치인들은 전통적 균형 조정 모델이 아닌 초국가적 “공동체 방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고안했다.
- 2) 프랑스-독일 (파리-베를린) 축에 의해 생성된 리더십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의 원동력이 되었다.
- 3) 주권을 공유하고 통합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강력하고 합법적인 공동 기관을 설립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었다.
- 4) 연대와 관용으로 결합된 합의적인 유럽 연합의 접근법은 주요 문제 및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그 회원국들이 준비될 때까지 정책적 전진을 위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이동시켰다.

EU 협력 프로젝트의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EU를 잘 이끌어 왔다. 한편, 최근의 EU는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여러 단계의 통합이 가능한 ‘다중 속도 유럽(multi-speed Europe)’이 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원국이 유로존 또는 Schengen passport-free zone<sup>24)</sup>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협정은 영국과 같은 일부 유럽 회의론적 국가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핵심 원칙은 강력한 공동 기구를 통해 주권을 공유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어떤 지역 기구도 통합뿐만이 아닌, 정치나 경제 협력 측면에서 EU의 통합의 형태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

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됨.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함.

23) 콘라트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1876.01.05.~1967.04.19)는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의 초대 연방총리. 그는 먼저 대사를 교환한 후 외교 관계를 다시 열고 의안을 해결하는 이른바 ‘아데나워 방식’이란 특수한 외교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EEC(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여 그 실현에 노력하였다.

24) Schengen passport-free zone은 유럽 공식적 여권을 폐지한 상태와 다른 모든 유형의 테두리 제 어 상호 경계에서, 주로 공통의 비자 정책을 통해 국제 여행 목적을 위한 단일 관할 구역으로 기능을 함. 이 지역은 1985년 Schengen 협정에 따라 명명되었다.

## 2. EU의 지역과 국가 간의 협력

공동 유럽 공간의 건설과 유럽 통합 초석의 핵심인 EU의 국가협력모델은 국가 간의 경계가 장벽이 아닌 것을 명확히 보장하고, 유럽인을 더 가깝게 하며, 공통적인 문제를 협력으로 해결하고, 아이디어와 자산을 공유하며, 공통 목표를 향한 전략적 업무를 장려하도록 돕고 있다. EU 회원국 간의 국가협력을 위한 통합 기능으로는 다음의 <그림 7>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9> EU의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에 관한 통합 기능<sup>25)</sup>

독점적인 권한 Exclusive competence	공유 권한 Shared competence		지원 권한 Supporting competence
EU는 다음 조항에 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시 및 국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짐.	회원국은 EU 연합지역에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EU는 다음 조항에 관해 회원국의 권한 행사를 금지해서는 안 됨.	EU는 회원국의 행동을 지원, 조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관세 연합(Customs union) 2. 내부 시장의 기능에 필요한 규칙 수립 3. EU 회원국에 대한 통화정책 4. 수산정책: 해양생물자원보존 5. EU 상업정책 6. 국제협정의 결정	1. 내부 시장 2. 조약에서 정의된 사회 정책 3. 경제, 사회와 영토 단결력 4. 농업과 수산(단, 해양생물자원 보존은 제외) 5. 환경 6. 소비자 보호 7. EU 국가 내 운송 8. EU 횡단 네트워크 9. EU의 에너지 정책 10. 자유, 보안 및 정의 영역 11. 이 조약에 정의된 공중보전에 대한 안전 문제	1. 연구, 기술 개발 및 (외부) 공간 2.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EU는 회원국 정책을 조정하거나, 다음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공통 정책을 보완함. 1. 경제, 고용 및 사회 정책의 조정 2. 공통 외교, 안보 및 국방 정책	1. 인간 건강의 보호와 개선 2. 산업 3. 문화 4. 관광 여행 5. 교육, 청소년, 스포츠 및 직업 훈련 6. 시민 보호 (방재) 7. 행정 협력

EU의 국가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에 관한 통합 기능으로는,

- 1) 특정 분야에서의 동맹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동맹국만이 법적 구속력 있는 행위를 채택할 수 있다.
- 2) 조약이 회원국과 특정 영역에서 공유하는 권한을 동맹국에 부여하는 경우 동맹국과

25) European Commission, "EU의 지역 및 국가 간의 협력(Cooperation between regions and countries, 2019.01.24)."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은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영역 및 범위 설정, 그리고 약정을 결정함. 유럽 연합 조약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닌 이 조약은 "the Treaties"라고 칭함.

출처: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ko/policy/cooperatio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ko/policy/cooperation/)

- 회원국은 그 영역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위를 입법하고 채택할 수 있다.
- 3) 회원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결정된 약정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및 고용 정책을 조정하며 동맹국은 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 4) 동맹국은 유럽 방위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동 방위 정책의 진보적 틀을 포함하여 공통된 외교 안보 정책을 정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5) 조약에 명시된 특정 지역 및 조건 하에서 EU는 회원국의 행동을 지원, 조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6) 동맹국의 역량을 행사하는 범위와 약정은 각 분야와 관련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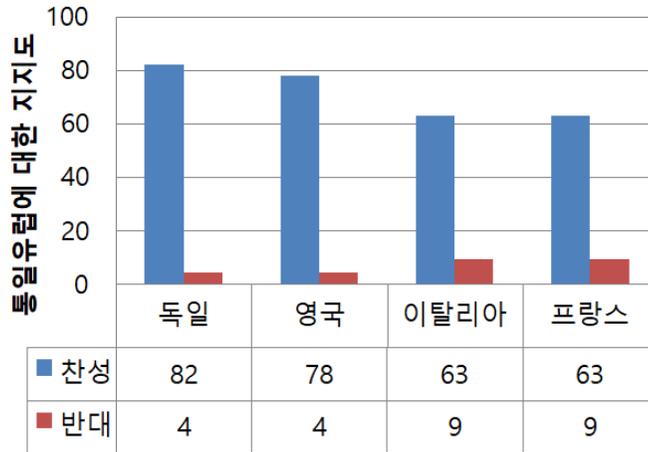
EU의 국가협력에 관한 통합 기능은 통합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럽 통합으로 인해 국가가 구식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EU 회원국의 국가 정부는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들이었고, 그들의 주권의 일부가 EU에 위임되면서 그것에 의해 약해지는 대신, 오히려 그 과정에 의해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일부 정책 영역에서는 주권을 공동 출자하는 것이 회원국의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의 급진적 변화 시기는 회원국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시기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선호가 갈라지고 동의할 수 없을 때처럼 느린 통합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과 그들 사이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 3. 유럽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다음에서 제시되는 EU 주요 국가들의 연구사례 및 여론조사를 통해 유럽 통합은 하나의 국가를 희망하는 국가통합 형태의 통일 모델보다는, 지역 공동체 형태인, ‘Sustainable Cooperation’을 더욱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유럽 통일에 대한 국가별 지지도는 통일 유럽을 위한 최초의 프로젝트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영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지도의 척도를 정리한 표이다. 즉, 영국 응답자의 78%가 그러했듯이 독일의 82%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이 다소 덜 열광적인 나라들에서도 63% 찬성했다. 분명히, 통합된 유럽에 대한 생각은 주요 유럽 국가들에 걸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0〉 유럽 통일에 대한 국가별 지지도<sup>26)</sup>



Attitudes Toward European Unification (October 1954 Survey) 참조. 저자 재구성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행된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통일 유럽에 대한 다양한 지원 측면을 측정하는 역사적 의견 데이터임과 동시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영국에서 실시된 수백 건의 국가 설문조사로부터 수집된 결과<sup>27)</sup>이다.

〈표 6〉 조사항목 및 적용연도 〈통일 유럽에 대한 지원측면 측정질문〉

조사 항목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질문 내용
1. 통일	1952	1995	일반적으로 당신은 유럽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1.찬성, 2.아니면 반대하는가?
2. 혜택	1983	2011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EU 공동체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당신의 나라에게 1.득이 되는지, 2.혹은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는가?
3. 이미지	2000	2017	일반적으로, EU는 당신에게 1.긍정적인, 2.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가?
4. EU회원국	1957	2011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1.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6) 1954년 10월 서독의 점령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유럽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임.

27) 〈그림 10〉 1952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통합 기간 전반에 걸쳐 약 45만 명의 개별 응답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시된 수백 건의 국가 설문조사임.

조사 항목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질문 내용
5. EUnakwon	2007	2017	당신은 EU의 미래에 대해 1.낙천적, 2.혹은 비관적.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6. 통일속도	1973	2013	유럽연합과 유럽통일은 요즘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가?(1.정지 상태, 2.가능한 한 빨리 실행)
7. 통일폐지	1970	~2004	만약 내일 유럽공동체인 EU가 폐지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1.유감, 2.아니면 안도하겠는가?

〈표 6〉 조사항목 및 적용 연도 〈통일 유럽에 대한 지원 측면 측정 질문〉에는 유럽 통합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기 제시된 질문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지원과 통합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 통합을 위한 지원, 예를 들어 EU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등 차별 없는 지원 조치와 더불어 유럽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된다.

〈표 7〉 유럽 통합 지원의 치수성 (1952-2017)<sup>28)</sup>

적용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항목		항목		항목		항목	
	1	2	1	2	1	2	1	2
1952-2017	2.84 (66.0)	0.73 (16.9)	3.03 (70.6)	0.53 (12.4)	3.21 (74.6)	0.69 (16.0)	2.54 (60.7)	0.78 (18.6)
1973-2017	4.06 (67.9)	1.01 (17.0)	4.17 (69.9)	0.58 (9.81)	4.34 (72.5)	1.05 (17.5)	3.64 (61.9)	0.85 (14.5)

[참조] 항목은 고유 값 추정치. 볼드체는 고유 값 > 1./괄호 안의 숫자는 각 치수에 의해 설명. 백분율, %의 분산을 나타냄. 두 기간(1952-2017 및 1973-2017) 동안 모든 조사 항목을 동일한 수로 사용 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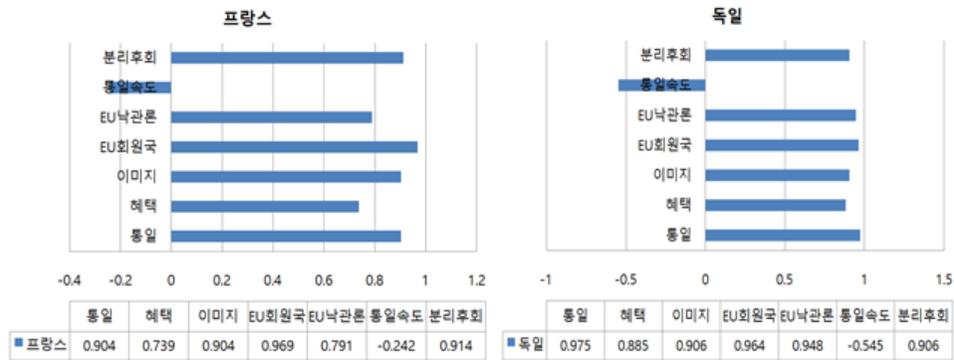
〈표 7〉 본 여론조사의 결과로는 4개국 모두에서 항목.1이 항목.2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973-2017 기간 동안의 고유 값은 4.06(프랑스), 4.17(독일), 4.34(이탈리아),

28) 유럽 통합 지원의 치수성(1952-2017)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다음의 두 가지 기간을 분석함. 첫째, 1952년에서 2017년 사이의 유럽 통합 이력을 위해 〈표 7〉에서 수집한 모든 설문 조사로 구성됨. 둘째, 1973년 이후 유로바미터(Eurobarometer)에 의해 수행된 모든 조사를 포함하는 기간임.

그리고 3.64(영국)로 1952-2017 기간의 2.84(프랑스), 3.03(독일), 3.21(이탈리아), 그리고 2.54(영국)보다 항상 항목.1에서 치수 1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각 항목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양에 반영된다. 결과에 따르면 1952-2017년 기간 동안 약 66%(프랑스)에서 70.6%(독일), 74.6%(이탈리아), 그리고 60.7%(영국)을 차지한다. 이와 유사하게, 1973년 이후 4년 이상 동안 67.7%(프랑스)에서 69.9%(독일), 72.5%(이탈리아), 그리고 61.9%(영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항목은 기본 구성의 3분의 2와 4분의 3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는 여론 조사에서 다른 수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호의적인 결과이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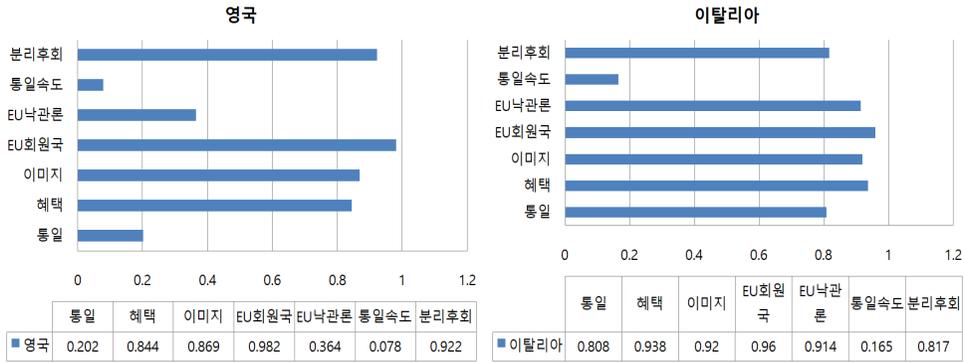
이에 항목.1과 2를 함께 분석해보면, 고유 값과 분산의 패턴이 다음과 같은 기준선 추론을 이끌어낸다. 우선, 우리가 전체 기간을 사용하든 아니면 유로바미터(Eurobarometer)<sup>30)</sup>가 시작된 이후만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유럽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본질적으로 일차원적이다. 게다가, 국가 간 고유 가치의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유럽에 대한 선호도가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에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다.

〈그림 11〉 유럽통일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조사 (1973-2017)



29) 각 수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에 항목.2가 있으며, 이 수치는 여론 분산의 작은 부분을 차지함. 항목.2에서 설명하는 분산의 범위는 9.81%(독일, 1973-2017)에서 18.6%(영국, 1952-2017)인.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결과의 패턴이 네 나라 전체에 걸쳐 균일하며, 기본적인 여론들 중에서 한 가지 지배적인 항목 1이 가장 크게 차지함.

30)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는 1973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 조사의 시리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국소 문제를 해결함. McLaren, 2006, Chapter 2 에서 Mannheim 누적 Eurobarometer 추세 파일을 사용하여 유럽 통일과 EU 가입에 대한 지지도가 모든 면에서 매우 관련 있음을 증명함.



‘Preference For Europe Factor Loadings(1973-2017)’참조. 저자 재구성

〈그림 11〉 유럽 통일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조사 (1973-2017)에서 국가별로 그 결과가 유사한가? 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개 조사 항목 중 약 4개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그중 일부는 0.90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집합적으로 핵심 지원 지수치를 잘 포착하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 3-1, 항목4〉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1.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프랑스(0.969), 독일(0.964), 이탈리아(0.96), 영국(0.982)로 4개 국가 모두 0.9를 초과하여 공통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3-1, 항목5〉 “당신은 EU의 미래에 대해 1. 낙천적, 2. 혹은 비관적.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독일(0.948)과 이탈리아(0.914)에서만 0.9를 초과하였고, 영국(0.364)로 프랑스(0.791)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표 3-1, 항목6〉 “유럽 연합과 유럽 통일은 요즘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가? (1.정지 상태, 2.가능한 한 빨리 실행)”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0.545(독일) > -0.242(프랑스) > 0.078(영국) > 0.165(이탈리아) 순으로 4개국 모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해 줄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많은 공통 핵심 항목이 유럽 선호도의 기초를 형성하며, 우리의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선호가 단순히 유럽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질문들의 혼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3-1〉의 여론 조사에서 실시된 모든 질문들이 통일 유럽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에 강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통합 속도에 대한 만족은 유럽에 대한 선호에 바탕을 둔 지배적인 차원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의 새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국가협력임과 같이, EU도 국가통합을 강조했던 기존 여론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Sustainable Cooperation’을 제도화

시키고자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도 보다 더 폭넓은 협력 상태를 안정화 시켜 놓은 국가협력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Sustainable Cooperation’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모델을 지향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 V. 결론

2018년 02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함께 부각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개념 또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1%, 반대는 23.5%가 나오는 만큼, 기존의 통일 연구와 개념들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설문결과였다. 이러한 응답에 동의한다고 답한,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20대가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뒤를 이어, 30대 43.8%, 40대 43.8%, 50대 37.2%, 60대 이상 34%로 젊을수록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담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남한과 북한의 단일 된 통일의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본 질문에 대해서는 20대의 62.3%가 ‘평화로운 공존의 형태’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동의를 보였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더욱 강조되어져 왔다면, 현재의 2030세대는 이 개념자체에서 변화하여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에 대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통일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통일의 개념으로 인하여 2018년 이루어진 남북 단일팀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을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함께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거의 통일 개념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존하며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방법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여기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의 개념이 변화해감에 따라, 통일 관련 연구의 방법과 형태 또한 함께 변해가야하는 필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적인 공존’의 형태를 지난 60여년 간 이어온 세계적인 EU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하는 통일의 개념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U는 우호적인 공존을 위한 커뮤니티의 형태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들이 모였지만, 서로의 국가들의 동질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들과 평화적인 공동체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지난 60여 년 동안 평화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단순한 통일의 개념을 ‘하나’로만 여기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각도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통일의 개념으로 접근해 나아갈 때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국가의 형태만 강조하기보다,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로써 통일의 개념이 변화해 가고, 공동체로서의 통일을 생각해 볼 시기이다.



- 권영승, 이수정. 2011. 글로벌 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1(2), 1-38.
- 문화체육관광부. 2016. 10. 201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2016. 10. 17.).  
출처: 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251 (검색일: 2019. 01. 10.).
- 신현석. 2005.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의 구성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3(3), 279-318.
- 안득기. 2007.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1(1), 1-28.
- 정은미. 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통일과 평화 5(2), 74-104.
- 장준하. 1972. 민족주의자의 길. 씨의 소리.
- Anderson, C. 1998. When in doubt, use Proxies: Attitudes toward domestic politics and support for European integr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1(5), 569-601.
- Andrei, Liviu C. 2012. The economic integration: Concept and end of process. Theory and Applied Economics 19(10), 55-70.
- Benjamin, C. 2007. Enlargement and the international role of Euro.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4(5), 746-773.
- Chintrakarn, P. 2008. Estimating the Euro Effects on Trade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6(1), 186-198.
- Gediminas, D. 2013. European Integration: Historical Aspects and Current Problems.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3(6), 01-07.
- Katharina, H. 2012. Differentiated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Many concepts, sparse theory, dew data.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9(2), 292-305.
- Nikola, Lj. 2015. The concept of political integration: The perspectives of neo-functionalist theory. Journal of Liberty and International Affairs 1(1), 01-14.
- 뉴스줌
- 조선일보
- 한겨레

● 투고일: 2019.01.29. ● 심사일: 2019.01.30. ● 게재확정일: 2019.02.13.

## | Abstract |

#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Tasks of Korean Unification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Choi Inyou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ung Dagam (Dong-A University)

In February 2018, at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the essential question of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unification in Korea has also begun to emerge socially because of a single team for women's ice hockey. 41.1% of the respondents said "South and North Korea do not necessarily have to form a single nation". That is, they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unify because they are Koreans. And 47.8% of the respondents agreed "if the two Koreas can co-exist peacefully without war, unification is not necessary". This can be interpreted the concept of "peaceful co-existence" is more importantly accepted by the younger generation and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persuasive as the concept of unification. Although the EU has gathered different countries, it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maintain a peaceful community for the past 60 years. It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concept of unification that Korea has to go through in the case of the EU, which has been in the form of 'peaceful co-existence'. Therefore, it is time to approach the concept of new unification, which can co-exist peacefully in various fields, rather than merely regarding the concept of unification as 'the one'.

〈Key word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nge of concept of unification, Gradual integration, EU, Cooperation